

해수부, K-수산식품 해외진출에 791억 투입

전년 대비 예산 236억 대폭 늘려
수출바우처 등 지원대상 확대
수출효자품목 김, ‘gim’으로 홍보

K-수산식품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예산이 올해 큰 폭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국내산 수산식품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비롯해 해외인지도 제고, 신규판로 개척 등을 적극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22일 ‘2026년도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사업’ 예산을 전년대비 236억원 늘어난 791억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수출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도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수산식품 수출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수출 바우처(서비스 이용권) 지원 대상을 기존 100개사에서 158개사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수출 경험이 없는 내수기업부터 초보-성장-고도화 단계의 기업까지 성장사다리 체계를 구축해,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15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김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뉴시스

방침이다.

또 수출용 수산식품의 개발을 위한 ‘유망상품화’ 지원 대상을 기존 34개사에서 68개사로 늘린다. 수출품목 다변화를 위한 ‘선도조직’ 육성도 기존 8개에서 12개로 확대한다.

한류와 연계한 K-씨푸드 마케팅도 강화한다. 유명인을 활용한 K-씨푸드 콘텐츠를 제작·배포하고 내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우리 수산식품을 홍보하기 위

한 면세점 마케팅, 수출효자품목 김의 한국산 인식 확대를 위한 ‘gim’ 명칭 홍보 등에 나선다.

해외에서 김은 nori·seaweed 등으로 불리며 한국산이라는 인식이 저조하다. 전 세계 소비자 대상으로 gim 명칭을 확산해 우리 김이 타국산과 구분될 수 있도록 위상을 공고히 다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로 수출되는 수산물의 신

선도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통·물류 지원도 확대한다. 산지에서 수출국 현지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발생하는 유통·물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국내·외 물류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 수출기업의 관세·비관세 대응과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수출 시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는 국제인증의 취득 지원(48→50종)과 환율 변동 등 대내외 위험요소 대응을 위한 보험 지원(100→200개사)을 확대하고, 해외시장 정보 제공과 비관세장벽 대응 지원을 위한 해외 시장 분석센터를 지속 운영한다.

해수부는 이와 관련해 오는 2월 2일부터 11일까지 국내 6개 권역별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2026년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사업’ 내용을 수출기업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는 등 소통 강화에 나선다.

설명회는 다음 달 2일 부산·경남을 시작으로 3일 강원·경북, 4일 서울·경기·인천, 9일 충남·충북, 10일 전남·전북, 11일 제주에서 예정돼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사업장 감독 5.2만 → 9만 확대… “위법 적발 시 즉시 제재”

노동부 ‘올해 사업장 감독계획’ 발표
노동분야 ‘3대 격차해소’ 역량 집중
산업안전 분야 감독 인프라 대폭 확충

정부가 임금체불과 장시간 노동, 산업재해 위험 사업장을 정조준해 2026년 사업장 감독 물량을 9만곳으로 대폭 늘린다. 반복적·고의적 법 위반 기업에는 즉각 제재를 원칙으로 하되, 영세 사업장에는 컨설팅 등 지원을 병행한다.

노동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 전체 감독 규모는 전년 5만2000곳에서 올해 9만곳으로 약 2배 가까이 확대된다. 분야별로는 노동 분야 4만곳, 산업안전 분야 5만곳이다.

지나해 도입한 노동·산업안전통합감독도 확대해 현장의 위법·위험의 구조적 원인을 확인하고 개선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노동 분야에서는 임금체불, 장시간·공짜 노동, 취약계층 보호 등 ‘3대 격차

해소 분야’에 감독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체불 신고가 반복된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 감독을 도입해 숨은 체불까지 선제적으로 적발한다는 방침이다. 전수조사 이후에도 체불이 재발하면 수시·특별 감독으로 단계적으로 제재 수위를 높인다.

장시간 노동 감독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된다. 고용부는 연 4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포괄임금제 오·남용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교대제 운영 사업장이나 특별연장근로를 반복하는 사업장도 중점 감독 대상에 포함한다. 올해 추진 예정인 포괄임금 원칙적 금지 입법이전부터 감독을 적극 추진한다.

청년·외국인·장애인 노동자 등 취약계층 보호 감독도 확대된다.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지자체와 합동 감독을 실시하고, 대학가 편의점·카페 등 청년 다수 고용 업종은 방학 기간 집중 점검한다.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 노동자와 동

일한 업무를 함에도 임금 등의 차별을 받고 있지 않은지 연간 200곳에 대해 중점 감독해,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의 원칙을 현장에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현장 수요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재직자 익명 신고센터’ 운영을 상시화하고, 익명 제보에 기반한 감독을 대폭 늘린다. 고용부에 따르면 익명 제보 사업장의 법 위반율은 85.8%로, 일반 감독 법 위반율(57%)보다 높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 다수 접수 사업장 등 법 위반 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선제적 예방감독을 강화하고, 가짜 3.3 위장 고용, 사업장 쪼개기 등 새로운 사회적 이슈 분야에 대한 감독도 확대한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감독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산업안전 감독관은 895명에서 2095명으로 2배 이상 증원하고, 전국 70개 패트론타와 패트론타 286대를 운영해 상시 기동 대응 체계를 구축한

다. 전국 지방 관서에 드론 50대를 배치해 벌목·지붕공사 등 감독관이 접근하기 어려운 현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노동부는 법 위반에 대해서는 ‘적발 시 즉시 제재’ 원칙을 적용한다. 시정조치 위주였던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은 폐지하고, 모든 점검에서 위험성평가 이행 여부를 필수 확인한다. 중대재해의 전조로 꼽히는 중상해 재해에 대한 감독도 새로 도입한다.

특히 “감독을 받았으니 당분간 안 올 것”이라는 인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감독을 실시한 사업장 중 현장 위험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이 확인될 때까지 반복 감독한다.

영세 사업장에는 ‘선 지원 후 단속’ 체계를 적용한다. 재정·기술 지원과 계도를 우선 제공하되, 개선되지 않으면 집중 감독으로 전환한다. 반면 중·대형 사업장에는 전담 관리 체계를 적용하고 산재 발생 시 엄정 책임을 묻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근로자 66% 주 52시간 초과근무

노동부, 하청업체 근로감독 실시
임금 3700만원 미지급 사례도 적발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한 건설노동자가 사망한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현장 하청업체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근로자들의 장시간 근로가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SK에코플랜트가 시공하는 해당 현장 하청업체 4곳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출역 인원 1248명 중 827명(66.3%)이 1주 연장근로 한도(12시간)를 초과해 근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난 9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현장에서 분주하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22일 밝혔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한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노동부는 휴

일근로수당 등 임금 3700만원이 미지급된 사례도 적발해 시정지시를 내렸다.

이번 근로감독은 앞서 해당 현장에서 일하던 건설노동자 1명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이뤄졌다. 노동부는 당시 고인이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한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해 12월 8일부터 31일까지 소속 업체를 포함해 하청업체 4곳에 대한 근로감독을 진행했다.

노동부는 이들 하청업체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근로시간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실제 개선 결과를 5월 8일

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개선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즉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또 올해 1월 동일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추가로 사망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날부터 2월 13일까지 해당 하청업체의 전체 현장을 대상으로 추가근로감독을 진행한다. 위법사항 확인 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휴한기 산재 예방을 위한 행정지도도 병행한다. 이달 말까지 해당 현장 전체 노동자를 대상으로 혈관건강검사를 실시하는 동안 야간·철야 작업을 중지하도록 지도하고, 한파특보 발령 시 주요 현장을 중심으로 한파 안전수칙과 보건관리 실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전력거래소 ‘재생에너지 준중양급전’ 오는 봄철부터 본격 시행

전력거래소가 재생에너지와 집합전력자원(VPP)을 급전자원으로 활용하는 ‘재생에너지 준중양급전 운영제도’를 오는 봄철부터 본격 시행한다. 전력 수요가 낮은 봄·가을철 경부하기 전력계통 불안정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전력거래소는 육지 전력계통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해당 제도를 2026년 봄철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그간 급전지시를 받지 않던 비중양급전 발전기를 경부하기에 한해 급전 운영에 활용하고, 해당 발전기가 제공한 제어가능용량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이 제도는 지난해 10월 시범 도입됐으며, 올해 3월부터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기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한다.

참여 대상은 제주와 동해안을 제외한 지역 변전소에 접속된 발전기에 한정된다. 설비용량 20MW 초과 발전기는 단독 참여가 가능하며, 20MW 이하 소규모 발전기는 전력중개사업자(VPP)를 통해 집합전력자원 형태로 신청할 수 있다.

제도 운영 기간은 봄·가을철인 3~5월과 9~11월이며, 운영 시간은 평일·휴일 구분 없이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참여 사업자는 전력거래소의 실시간 급전지시에 1분 이내로 응동할 수 있는 온라인 원격제어 성능을 갖춰야 하며,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어촌 ESG 경영실천’ 기업·기관 68곳 선정

정부가 2025년 ‘농어촌 ESG(환경·사회·투명) 경영 실천’ 인정 기업·기관으로 68개사를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민간기업 17개사와 공공기관 51개사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따르면 정부가 기업의 ESG 경영을 농어촌 상생협력으로 연결하는 ‘농어촌 ESG 실천인정제’가 본격 확산하고 있다. 올해 인정 기업·기관 수는 전년대비 30% 늘어나 제도 도입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농어촌ESG 실천인정제는농어업·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2년 시범 도입된 제도다. 지난해 평가 지표를 개선하고 농촌사회공헌인증제와 통합하는 등 제도를 확대·개편해, 농식품부·해수부·상생협력재단이 공동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환경(E)·사회(S)·지배구조(G) 3개 분야 33개 지표를 종합 평가했다. 농어촌 ESG 심의위원회 심의와 농어촌상생기금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이 이뤄졌다.

선정 기업·기관 수는 2022년 23개사에서 2023년 41개사, 2024년 52개사, 올해 68개사로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우수사례로는 롯데케미칼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꼽혔다. 롯데케미칼은 5억원 상당의벼를수매해 지역 복지단체 등에 쌀을 기증한 점이 사회 부문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세종=김연세 기자